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9
제65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 www.council.jeu.kr ISSN 2671-9754

02

제387회 임시회 개회



03

주요 이슈



08/09

생생 의정활동



10/11

함께 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벌초, 마음으로 간소하게 제주에서는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 벌초를 끝낸다. 코로나19가 제주 특유의 벌초 문화라는 추석 풍습마저 바꿔놓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추석에는 가족과 간소하게 마음을 전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공동묘지

코로나 이후 제주의 대응책, 내년 예산 운용방안 집중모색 제387회 임시회 개회...올해 첫 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로부터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2월 코로나 19 여파로 취소됐던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따른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9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 제 38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례 조례 개정안' 등을 비롯해 명예도민민중 수여대상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제주도로부터 2020년 재정관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등의 현안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태풍 피해현장 방문과 제주 드림타워 현장(소방안전분야) 확인 등도 예정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주민 반발이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비롯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제주목관아 사적공원 개방 촉구 청원' 등을 처리하고, 제주도로부터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의 결과 등을 보고 받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학생 인권 조례',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비롯해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반대 청원' 등을 심사한다.

● 개회사

“제주도, 코로나19 극복 ‘확장재정’ 펼쳐야” 좌남수 의장,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9월 16일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는 IMF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며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타 지자체보다 크다.”며,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박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며, “과감히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발전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좌 의장은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와 국고보조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중앙정부의 도 재정지원이 점차 줄고 있어 선제적인 중앙절충과 협상에도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의 공약사업은 도민들과 맺은 실천약속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 들은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

영시킨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에서는 도의원의 공약 관리가 뒷전”이라며 도의원 공약에 대해서도 지원, 관리를 요청했다.

그는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진단을 해야겠다.”며 “제주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 의장은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구조 개선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얼마 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의 공식사과가 있었다.”면서, “13년 만에 이루어진 사과이나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사면복권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얼마 전 도와 의회가 2년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었다.”며, “양 기관간에 공동 합의된 의제들이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회도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장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의석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고, 특히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단상을 낮춰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한 목소리

좌남수 의장 “전국 시·도의회 순회 방문”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가 9월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개최식 및 안전심의를

위한 임시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회장·임원 선출 및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5개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상정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좌남수 의장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난 9월 2일에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에게 ‘제주4·3사건 특별법’의 개정취지를 알리고, 정기회에

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공식요청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9월 9일에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향후 좌남수 의장은 12개 광역시·도의회를 17일 부터 순차적으로 방문,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역의회 별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를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좌 의장은 “올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87회 본회의 채택



더불어 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 사진)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6일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문에서 현행 4·3특별법 법률안을 토대로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제주

4·3평화공원 조성, 2014년 4·3희생자추념일 지정, 생계비 지원 등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 제주도민들의 피해 당사자로 구제받아야 할 권리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연내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을 통하여 ‘국회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 내용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정부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주요이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도 상설정책협의회 ‘첫 단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 협력 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9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설정책협의회는 도의회와 제주도가 코로나19로 대변되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코로나대응특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제주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과 각 국장 등이 참여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회와 제주자치도가 위기극복에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포스트코로나 방역·경제회생 방향, ▲2021년도 재정편성 방향, ▲제주형 뉴딜 실무T/F 구성,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재난과도 같은 시기에 도와 정책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설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공동선언문을 마련한 이래 수차례 현안 협의를 위해 개최 일정을 조율해 왔으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번 개최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혁신 2호, 사무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호(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외부강의 기준 강화는 그동안 회기 및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로 의정지원 활동이 약화되고, 피감기관(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외부강의 참여로 견제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는 업무상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기준마련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이번 외부강의 참여기준 강화를 통해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혁신 3호, ‘의회전문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8월 20일, 의회 혁신 제3호로 의회의 전문성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회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가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의회 의무’의 적극적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입 3개월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의원에 대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내 정책지원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의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강

의, 토론, 사례발표, 현장방문 등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정연수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타 민간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협업하여 의회 고유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로 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은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

해 매년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이 한 몫을 한다는 점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의원들이 의회공무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8월 28일 고영권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이날 오후 인사청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정무부지사는 최고위직으로 공직사회와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 준법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 “예정자는 농지법 위반, 재산신고 축소,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의 덕목과 자질

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정자는 인사청문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농지처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4대 농정혁신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에 원희룡 지사는 청문결과에 따른 부적격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4·3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보고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사진)는 9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6차 4·3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16일 구성되어 4·3추념식 행사 평가보고회, 제주 4·3특별법 소속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27회의 결친 간담회·토론회·보고회 등을 개최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 제주4·3진상규명 운동 사진전, 4·3특별위원회와 여순특별위원회의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즉각 제정’공동성명서 발표, 다큐 투어리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의회 주도로 12개 기관의 참여하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을 통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정민구 위원장은 “11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되는 4·3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각 단체와 4·3유족회와 추진해온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피해보상, 불법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한국전쟁 전후 어려움을 겪었던 타 지역과의 역사 인식의 공유와 공동 해결 노력을 다해주시길”을 당부 하였다.

또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그동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훈배 부위원장, 김황국, 현길호, 고태순, 고현수, 강성민, 강성의, 문종태, 이승아, 송영훈, 김희현, 김장영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와 타 지방의회의 연대를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소회를 밝혔다.

또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그동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훈배 부위원장, 김황국, 현길호, 고태순, 고현수, 강성민, 강성의, 문종태, 이승아, 송영훈, 김희현, 김장영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와 타 지방의회의 연대를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소회를 밝혔다.

‘4·3특별법 개정 첫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황인구 의원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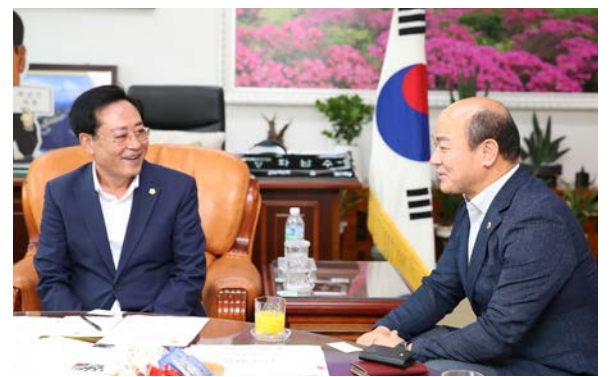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8월 7일 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난 8월 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건의안은 지난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처음

으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과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앞으로 대표 발의하는 의원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추천하고 감사패를 수여하겠다.”고 말했다.

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민특별명령 “경제방역, 도지사가 직접 챙겨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제주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조례 개정 1호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3일 발의했다.

경제정책협의회 조례는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경제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경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였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민관 합이기구인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안에 마련함으로써,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경제정책협의회가 2017년 2월 이후 위원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등이 구성·운영 중이긴 하나,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기에 기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제방역은 감염병 방역을 제외하고,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경제정책협의체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 했다”면서,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또 다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서면답변에 ‘강한 유감’ 표명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9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련 서면질문과 그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을 방문하여,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신규 특허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위의 요청에 따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 결정으로, 제주도내 자영업,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으로, 코로나 19 급증 여파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해당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서면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세관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19년 제주도의 반대를 고려하여 특허를 미부여하되, 1년 더 요건 충족 등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이후 급변 법적 요건 충족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특허 부여를 의결 하였는 바, 위원회 결정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다만 제주도 의견을 적극적 수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 상생협력의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



극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 계승·존중, 친일청산 사업 추진 강성민 의원,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개정



우리민족이 겪은 뼈아픈 역사인 경술국치일을 앞두고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 계승·존중과 친일청산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조례에 담겨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의원은 “일제 강점기 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되

새기고, 이에 대한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함”과 아울러 “행정당국이 친일청산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진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3조의2에 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과 제3조의3에 친일청산 조항이 추가된다.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여야 하고(제3조의2제1항)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조의2제2

항)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의2제3항)

또한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제3조의3제1항) ▲도지사는 친일청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조의3제2항)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는 8월 26일 김상협 제11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자위는 김 예정자의 주요 경력이 제주가 아닌 도외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주와의 연관성은 명예도민을 제외하고 깊다고 볼 수 없어 제주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제주현안에 대한 제주연구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장으로서 종합적 전문성, 준법성, 도정철학 부합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청문 과정에서 의원들은 김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우리들

의 미래가 도내 유관기관의 용역을 수수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결과물 부실 등을 지적했다. 또 주요 경력과 활동이 에너지 분야로서 전문성을 인정되거나 관련 연구 실적이 특정분야에 치중하고 그 결과도 왕성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면 제주의 최고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종합적인 연구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4대강 개발사업 등 김 예정자의 정책철학이 도정의 철학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와 운전경력증명서 상 교통사고 및 면허취소 사유도 근거자료 불출분 등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예정자는 청문 인사말에서 “그린뉴딜을 비롯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을 비롯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은 물론 제주미래



를 이끌 자체적 전략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이슈발굴을 통해 도정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지원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제주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8월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유동철 원장(부산복지개발원)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

지원 정책방안’주제발표와 도내·외 주거복지·장애인 통합돌봄 담당자, 관계 공무원 참여하여 장애인 통합돌봄이 제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제공체계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김경학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마련이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지원 방안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밝혔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8월 1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회협회(회장 허순임)와 공동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의 장을 준비하게 되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박차상 교수(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학과)의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및 욕구조사’결과 및 광경인 사무처장(서울특별시사

회복지사회협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우수사례’ 주제발표와 함께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핵심주체로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방안 등 논의가 이뤄졌다.

양영식 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의 질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장, 처우개선 방안 등 다양하게 제안되는 의견들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

신설 위원회 사전 검토제 도입, 통합위 설치 근거 마련 강성의 의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본 조례 개정은 난립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적절히 조절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제주도 경우 정책 자문 및 심의·평가를 위한 법령·조례상의 위원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제주도 각종 위원회가 260여개였던 반면, 타 사·도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수가 200개 미만이었다. 이를 통해 제주도 각종 위원회의 수가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관리 시스템은 미

비하여, 개최 실적이 미비하거나 단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신설 위원회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강화하고, 기능과 구성 기준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하며, 2년간 미 개최 또는 미 구성된 위원회를 비상설화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①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설치계획서에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존속기한 설정,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총괄부서의 실질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② 실·국 단위별로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거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 긴급한 안전 발생이나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성의 의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적절한 설치·운영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명목상으로만 설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지자체가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설치된다면, 그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은 감소할 것”이라며, “본 조례 개정이 앞으로 도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하반기 대표단 구성 대표 박호형, 부대표 송영훈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가 8월 6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에 박호형 의원, 부대표에 송영훈 의원을 선출하고, 연구사업 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소속 회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차원에서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9대 의회 때 창립되어 운영하여 왔

다.

현재, 연구회 회원은 박호형 대표, 송영훈 부대표와 함께 강성민(더불어민주당), 박원철(더불어민주당),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조훈배(더불어민주당), 한영진(민생당)의원 등 제11대 도의회의원 7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신임 박호형 대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와 그린 뉴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따른 제주지역 준비과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8월 25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박원철·김경미 의원실 공동주관으로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해 온 방귀희(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이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취지와 제주지역의 지원제도 마련 방안을 위한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며, 토론에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을 비롯해서 학계,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재단,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주지역의 지원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원철 의원은 “장애예술인 관련 법률이 전무한 상태에서 독립 법률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독립법률이 제정된 만큼 법률의 근거 하에 실제 세부적인 집행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의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 또한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과 경제적 여건 모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 파악은 불



론 문화예술지원사업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열악하다고 본다”며, “새롭게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의 구체적인 법안내용이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 실정에 부합된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도민 지원 위한 조례개정안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8월 5일 서울제주도민회(회장 강한일)를 찾아 재외제주도민회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탐라영재관 4층 서울제주도민회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선 플랫폼 마케팅을 활용한 재외도민회와 제주도의 상생 발전 방안, 재외제주도민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 고향이 제주임에도 제주에 연고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고향방문사업, 서울도민회가 추진

하는 제주도농축수산물에 대해 수도권 지역 재외도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마케팅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김황국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도 관련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의 회 김황국 의원과 제주도청 채종협 평화대외협력과장, 강한일 도민회장과 서울도민회 관계자, 서울경기지역 재외도민회장들이 참석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계승 대표 김희현, 부대표 홍명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8월 10일 의원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 김희현 의원, 부대표 홍명환 의원을 재선출하였고, 2020년 연구사업 계획 등의 안건을 소속 회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희현 의원 제안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도의회 최초의 의원연구모임으로 2006년 창립 이후 총 57차례의 정책토론회, 9회에 걸친 초청강연 및 간담회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 서왔다. 제8대, 제9대, 제10대 의회를 걸쳐 제11대에까지 꾸준히 제주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연구를 계승·발전할 계획이다.

김희현 대표와 함께 제4기 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할 의원은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강성균(더불어민주

당, 제주시 예월읍), 강성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 문경윤(더불어민주당, 비례), 오영희(자유한국당, 비례), 홍명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의 제11대 도의회의원 7명이다.

김희현 대표는 향후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연계한 제주형 뉴딜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제주 사회의 디지털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사회 전반에 변화와 전환으로 제주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주형 미래전략산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표했다.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릴레이 소통 김경미 의원,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월 1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주도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진단·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 정책 지원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경미 의원·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 간담회는 제주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과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첫 번째 간담회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제주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의 보완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이번 정책 간담회는 제주 사회적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들과 문제점을 확인하여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재정립과 발전적 방향 모색해야 할 시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미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첫 시작으로 향



후,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과 소통채널을 보다 강화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릴레이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의원연구모임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기총회 후반기 회장에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8월 6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연구모임을 이끌어 나갈 임원 선출, 사업계획승인, 정관개정, 연구회 활성화 방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이번 정기총회 결과 제11대 하반기 회장에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부회장에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을 선출했다.

후반기 회장에 선출된 김장영 의원은 앞으로 교육의원으로서 전문적이고 확고한 교육철학을 토대로 제주교육발전연구회가 교육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

결과 구체적인 대안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연구회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제주교육현안에 대해서 각 계각층의 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제주도 교육발전을 염려하는 제주교육가족 및 제주도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을 피력하였다. 앞으로 실무계획을 통하여 제주교육현안들인 IB 도입, 학생비만, 학교폭력, 도박중독,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등에 대해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에 초청강연,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교육정책 현안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및 교육위원회(부공남위원장)와 공동으로 8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제주 교육정책 현안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대표가 1,600명의 주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요구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평가’를 비롯하여, 김대영 제주대학교 교수는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방안’, 강봉수 제주대학교 교수는 ‘고교 체제개편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최진욱 전교조 제주지

부정책실장은 ‘제주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민구 부의장은 “제주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며 발전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사회에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히면서,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목표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정책의 개선이나 폐지 등 적절하게 관리하여 정책 이행의 책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생 의정활동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원활한 추진 임정은 의원,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정마을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17년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었으나,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강정마을 미래 소득 보전을 위한 대체사업 발굴, 사업 부지 선정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정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강정마을에서 요청한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강정마을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최종 개정안을

조율하였다.

개정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강정마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기금 조성에 대한 도정의 의지 확인과 마을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위해 기 수립된 공동체회복사업 자체재원 등을 활용하여 기금 확보 방안 마련 등 기금 설치와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활용 방안을 명시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에게 적절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해야 김장영 교육의원, 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를 제38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확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관련법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을 명시하면서, 특히, 학교운동부 선정 및 폐지를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여 학교·학부모·동문회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 의원은, 학교 체육과 관련한 종전의 3개의 조례를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

여 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연계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매칭, 체육교육 활동시 공공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도내 학생들에게도 기관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다각도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 위한 제도화 송창권 의원, 전문가 간담회 갖고 조례제정 예정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지난 2019년 학교 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도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창권 의원은 “지난 해 제주 교육계에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각종 의례나 제도, 교과 내용 등 획일적인 식민지 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현재 식민잔재를 청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의 일제 식민잔재도 함께 청산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경상남도 등은 일본인 명의 토지 및 건물을 조사하여 공적 장부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본식 지명 정비를 추진하

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또한 세종시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 식민잔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시민제보 등을 접수한 상황이다.

송창권 의원은 도의회 강성민 의원 등과 함께 “우리 도에서도 일제잔재 청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올해 안으로 조례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경영실적 평가 양성평등 균형 유지 조항 포함하도록 한다 강성의 의원,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앞으로 실질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크게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때 지자체의 경우에는 부서별로 여성관리 직·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여성관리직·임원 비율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경영성과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만큼, 여성관리자 확대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주도가 경영실적 지표를 제시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표에 여성관리자 확대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조례안에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경영실적 평가 시에는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

성임원 확대하고,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성의 의원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원활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여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조직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때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가 민간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공공부문에서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본 조례 개정이 앞으로 진행될 도 출자·출연 기관의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염병 사태에 조직적으로 나선다 정민구 의원, 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2동)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감염병 사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구조를 만들 책무가 있고, 학생 및 교직원들은 감염병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은 물론, 관련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시에는 감염병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휴업 및 휴교 조치, 등교 중지 및 각종 행사의 취소와 연기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조례안에 감염병

발생으로부터 대응책,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백서 발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닥칠지 모를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감염병 예방교육은 개인위생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칫 의심증상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비난이나 따돌림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의료계 집단휴진 즉각 중단하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촉구

제주도의회가 제주 의료계를 향해 즉각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8월 31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이로 인한 진료거부·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의료인에게는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하루빨리

의료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만큼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주도정 역시 의료공백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진료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민들의 괴로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대한전공의협회의는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활동 보호 논의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 입법발의로 교육 3주체의 인권 보장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3개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8월 4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 9대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는데, 지

난 3월 24일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청원이 있었던 이후, 간담회와 좌담회,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교육활동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무가 명시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각각의 3주체별로 권리 보호에 관한 3개의 조례로 구성하여 각각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인권신장과 책임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고은실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있다.

또한 부공남 의원은 학부모들이 교육 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존의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1차 정책 간담회에 이어, 3개의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의 법제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8월 18일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하는 2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조례 개정안 마련 전문가 간담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고현수 대표, 한영진 부대표

의원연구모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이라 한다)은 8월 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연구회를 이끌 대표에 고현수 의원, 부대표 한영진 의원으로 전반기 임원을 전원 유임하기로 소속 회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책포럼은 그동안 인권 및 복지전문가 참여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인권과 복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법률적·제도적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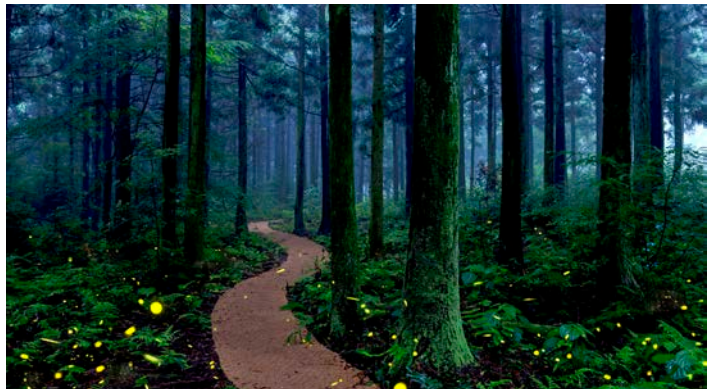
임시총회 개최 후 이어 열린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개정안 마련 전문가 간담회’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권한 강화,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평가 근거 마련, 인권센터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인권전문가들이 패넬토론으로 참여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고현수 대표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조례 개정안” 발제에 이어 정책포럼의 자문위원과 인권전문가 등 9명의 패넬 토론회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고현수 의원은 “2015년 인권 조례 제정 후 도지사의 무의지·무관심과 이를 추진할 인권전담부서와 전문가의 부재 속에 인권제도화가 정체된 상황”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임시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로 읽는 제주



숨빛소리

김신숙

외할머니에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물질을 배웠다지요
 외할머니 일찍 죽어 다시는 물질 안 한다
 고향을 떠나버렸지만 아이들 태어나서는
 가난한 삶 물리기 싫어, 악착같이 바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아무리 늙어도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나 죽으면, 너도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그 슬픔 참아도 참을 수 없는 날
 숨비꽃처럼 낮게 엎드려 울어도 보고
 그 울음 숨겨도 숨길 수 없는 날
 소라 껍데기 안으로 삼켜도 보았다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외할머니도 딸이 그리워
 엄마를 위한 별로 떠 있는 거
 외할머니 가신 곳으로 우리 엄마 헤엄쳐 가면
 나 그곳으로 헤엄쳐 갈 때까지
 함께 반짝여 주세요 별빛으로 노래해 주세요

외할머니 숨비소리, 우리 엄마 숨비소리
 숨빛숨빛 반짝반짝, 별자리로 항상 빛나 주세요
 밤하늘 바라보며 편지를 쓰면
 외할머니 오냐, 오냐, 오늘도 반짝입니다

나의 첫 동시집 『열두 살 해녀』 시집에는 들물시와 날물시가 한 편씩 있는데, 두 편의 시만 내가 스스로 쓴 시이고 다른 시들은 열두 살에 해녀가 되었다는 나의 엄마(고옥희)가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다. 3년 동안 4·3당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을 만나 구술 채록을 해서 그런지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슬프지만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들은 생각보다 요망졌다. 할머니들 이야기를 채록하다 보니 나는 우리 엄마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리고 해녀가 직업인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엮었다. 엄마 이야기를 엮다 보니 새삼 제주도에서 일한 것으로는 빠지지 않는 할망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출판사의 도움으로 '일하는 할망들' 구술동시집을 시리즈로 내기로 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까닭은 할머니들은 자연이 가득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해 온 옛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린이들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해녀 할머니 동시집을 시작으로 소와 말을 기른 할머니, 한라산에서 약초를 캔 할머니, 조각 보 같은 작은 발을 일구며 여러 가지 작물을 길러 낸 할머니,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기술을 밀천 삼아 평생 한복집에서 일한 할머니 등 다양한 동시집이 나오면 좋겠다.

동시집 '열두 살 해녀'는 세상의 어린이들이 한 번쯤은 해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보았다. 엄마처럼 우도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대부분 해녀가 되었다. 딸이 둘만 있으면 그 집은 딸 덕에 부자가 되었다. 엄마는 아들 둘이 있는 집에 막내 딸로 태어났다. 어머니 혼자서만 바다에 가 물질을 했기 때문에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어서 자라 해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다. 엄마와 함께 우도에서 자란 친구들은 모두 해녀가 되었다.

글 김신숙 / 시인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주요처리안건
계	11회	총118일	정례회 2회/41일, 임시회 9회/77일
3월	제380회 임시회	3.17.(화) ~3.24.(화) (8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81회 임시회	4.16.(목) ~4.29.(수) (10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82회 임시회	5.14.(목) ~5.21.(목) (8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6.15.(월) ~6.25.(목) (11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84회 임시회	7. 1.(수) ~7. 3.(금) (3일)	· 하반기 원구성
	제385회 임시회	7. 16.(목) ~7. 28.(화) (13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월	제385회 임시회	8.10.(월) (1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9월	제387회 임시회	9.16.(수) ~9.22.(화) (7일)	· 주요 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88회 임시회	10.13.(화) ~10.29.(목) (17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11.16.(월) ~12.15.(화) (30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90회 임시회	12.17.(목) ~12.23.(수) (7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청탁금지법 Q&A



Q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를 잘 써 달라'거나 '학생부를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 또는 '학생이 작성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숲과 함께하는 “새 탐조”



제주생명의숲에서는 김완병 박사와 함께하는 “새 탐조”행사를 개최하였다.

두견새가 우는 맑은 숲에서 제2차 이사회도 열려 팔색조 우는 소리를 듣고 식물의 생존 전략도 관찰하였다. 숲을 거닐며 숨만 쉬어도 힐링이 된다고 했다. 자연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지난 6월 27일 50여종이 새가 서식하고 있는 한남시험림 탐방로 숲에서 제주생명의 숲이 마련한 탐방 프로그램에 후원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숲 예찬론을 피력하였다.

프로그램 주제는 숲과 함께하는 “새 탐조”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어떠한 동물보다도 다양한 서식지를 갖고 있다는 새들의 습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무역사, 삼나무의 쓰임새, 잣성의 쌓인 경위까지 전문가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김완병 박사(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사)는 숲의 가치를 통해 생태자신의 확장성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생태적 삶의 터전으로써 숲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제주생명의 숲에서는 숲을 통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준비된 프로그램으로써 앞으로 곤충관찰, 숲힐링 Green Gym

체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Green Gym체험 활동을 가족과 함께 숲속에서 나무심기, 가꾸기, 목재이용 만들기, 새와 곤충 체험 등 숲사랑 프로그램으로 제주생명의숲에서 매년 계절별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향후 해양 숲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비양도 해양탐방 및 황근 자생지 복원 사업을 위해 준비위를 구성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숲사랑 운동에 함께 참여 해주시길 기대해본다.

고윤권 상임공동대표 / (사)제주생명의숲국민운동

청렴의 기본 ‘양심’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양심에 꺼리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양심 없는 놈’이나 ‘양심에 찢린다’라고 말한다. 어떤 법적 심판보다 무섭고, 두려운 것은 자신을 향해 말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투명한 업무처리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유혹에 빠지기 쉬울 때도 있을 것이다. 금품수수, 음주운전, 부당한 청탁 등은 언제 어디서든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다. 그래서 명절, 연말연시, 선거기간 중 하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청렴담당관실에서 청렴주의보 발령을 한다. 청렴주의보 발령은 반부패·청렴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또는 취약시기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에서 경고를 보내는 신호일 것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세상에

는 비밀이 없다는 뜻으로 언제가 부끄러운 행동이 타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청렴 마인드 갖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청렴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양심 심판대에 나를 세워서 행동이 떳떳한지를 반문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청렴한 삶을 위해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행동은 삼가는 투명한 공직자가 돼야 한다.

김용미 주무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 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 발



‘성 평등’은 무엇일까. 최근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혹은 ‘성 평등=인권’, ‘성 평등=여성=남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성 평등’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를 통한 많은 고민과 실천 속에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그 출발점이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9월1~7일 ‘양성평등주간’이 될 것 같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념 주간이다. 그런데 양성평등주간은 처음부터 이러한 명칭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주간’이라는 명칭이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었다. 그 기간도 그 해부터 매해 7월 첫 일주일(7.1~7.7)로 정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9월로 변경해 추진되고 있다.

2020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성 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 발’이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외 기념행사는 취소하고 양성평등 유공자 포상 위주로 정부 방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디딤돌상’ 7명(개인 6명, 단체 1)과 양성평

등 유공자에 8명이 선정돼 9월 3일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는다.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의 틀로 가두고 재단하는 ‘젠더박스’에서 벗어나, ‘다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를 실천하는 것이 곧 ‘차별 없는 가정’, ‘차별 없는 직장’, ‘차별 없는 학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것이 아닐까?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우리 모두 ‘일상에서의 성 평등’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순 성평등기획팀장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부패방지 청렴인 제주대회 청렴인증패 전달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부패방지 청렴인 제주대회를 개최하고 청렴인증패를 수여했다.

8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원덕호 상임대표와 제주부패방지교육대학장 탄해스님,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여명이 참석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부패방지 활동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제주도의회와 김태석 전 의장에게 청렴인증패를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명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제주시 공무원노조 임원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9월 10일 의장실에서 제주시 공무원노조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무직 노조 임원진은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임금, 지역주민 협약,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제주도 재정부담 가중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공단 전직자에 대한 통일된 임금 체계 구축 및 사전 협의,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 타부서 전출시 환경미화원으로 전직 처리, 시설공단 설립 시 환경시설 제외, 제주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시설공단 설립 원점에서 재논의 등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했다.

농수축경제위, 마이삭 피해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9월 3일 제주를 내습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지붕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양식장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소속 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은 현길

호 위원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로 생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 태풍 피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의회 의원 10명,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박진탁 이사장·이하 본부)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도의원 10명을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의원은 강성희, 강철남, 고현수, 김대진, 김용범, 양영식, 오영희,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의원이다.

또 제주도 장기기증 활성화 위원인 윤

두호 전 제주도의원이 본부 고문으로 추대됐다. 윤 전 의원은 2012년 장기기증 관련 조례를 발의해 제정되는 데 앞장섰다.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도의원들은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이 먼저 나서겠다."면서,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나눔의 진정함의 의미를 알리는 아임도너(I'M DONOR)챌린지에도 동참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9월 8일 '2020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에 대해 시상했다.

양유정 씨의 '원활한 휠체어 승하차를 위한 저상버스 정착 위치 표식 개발 운영'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그리고 장려상으로는 김경욱 씨의 '제

주마을 공동자조금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안'과 남상우 씨의 '교통약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 윤소현 씨의 '대학생·성인·노인을 위한 교류의 공간 필요성', 장진규 씨의 '비성수기 해수욕장 시설보호 및 이용 효율화'를 주제로 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한림항 등 찾아 태풍 예방활동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8월 26일 제8호 태풍 '바비'복상에 따른 태풍예방활동상황에 점검에 나섰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접어들어 따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사항 점검을 위해 한림항을 방문,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좌남수 의장은 "풍랑에 대비해 선박의 결박을 철저히 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 안전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태풍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설 것을 당부했다.

좌남수 의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9월 4일 정민구 부의장,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의 지명을 받은 좌남수 의장은 'Stay Strong,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합니다!'는 메시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다음주자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문대립 JDC 이사장, 김성훈 제주 한라대학교총장을 지명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무용론 ... '개선 필요'

정책연구실, 정책차롱 제11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일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차롱을 제11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차롱에 따르면 타 지자체와 달리 제주도의 경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해 오고 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의회예규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책연구실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그 제도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서 의회 인사청문회의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

도 내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 >도의회의 충분한 청문기간 확보로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이원적 검증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5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